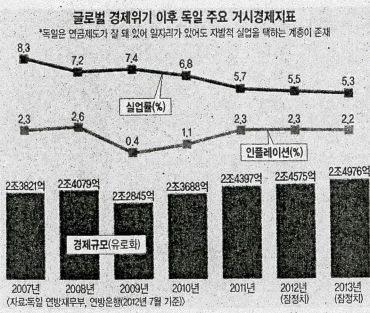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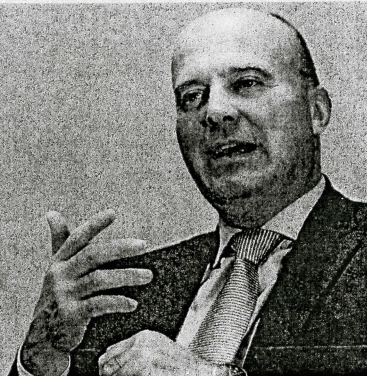


# 정권 바뀌어도 정책 큰 틀 계승 일관성이獨경제 성공 낳았다

◆ 인터뷰 하르트무트 코쉬 재무차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유럽을 광황 상태로 내몰고 있다. 실업률은 차츰 경기회복의 희망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국가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유럽연합(EU) 통계국이 밝힌 올 10월 독일의 실업률은 5.4%다. 독일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 자발적 실업자가 많은 독일 상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특히 스웨덴과 그리스의 실업률이 각각 26.2%, 25.4%인 점과 비교하면 독일 경제의 연두로라진다.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독일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지켜보는 실정이다.

하르트무트 코쉬(52)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을 지난달 29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에서 만났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연장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CSU) 소속의 6선 연방하원의원으로, 2009년 9월 재무차관 자리에 올랐다.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 회 회장을 12년 동안 맡은 지한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소비자 지갑 여는 기술력이 경쟁력  
직접적 중소기업 지원책 대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여건' 제공  
한국, 대·중소기업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만들어야

파 의원 겸 경제관료다. 그는 "재정위기로 유럽 소비자들이 지갑을 꽂았을 때 독일 기업들은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했다"면서 "독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구매행위를 하는 불황 속에서 꾸준히 팔리는 제품은 정말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라며 "독일 제품들은 경쟁력을 견고하고 있는데도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쉬 차관은 "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계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 정부와 기업은 독일 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독일 중소기업들이 지갑을 꽂았을 때 독일 기업들은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했다"면서 "독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구매행위를 하는 불황 속에서 꾸준히 팔리는 제품은 정말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라며 "독일 제품들은 경쟁력을 견고하고 있는데도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쉬 차관은 "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계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들 연구소가 중소기업들과 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 물고기잡이 줄을 던져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지만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들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러나 전문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독일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하지 않는 틈새를 찾아 성공해왔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차관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코쉬 차관은 한국 경제정책을 긍정적

1990년 유로화 통합 이후 독일의 EU지역 수출은 급증했다. 2010년 독일 수출의 63.3%가 역내 수출이었다. 유로존 경제위기로 최대 수출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독일기업은 흔들리지 않았다.

**독일 경제의 강점 2...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코쉬 차관은 "독일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삼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 없이 경제 안정이나 경제성장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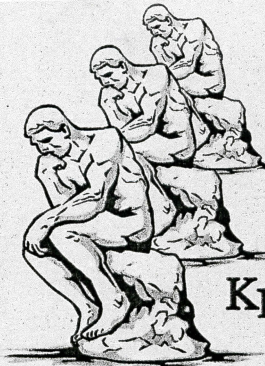
코쉬 차관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독일 정부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집권 세력이자 지금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회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었고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그 정책을 계승했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독일 경제의 성공을 낳았다"고 말했다.

독일은행 사태 이후에도 독일 경제의 개혁 정사전인 '여젠다 2010'을 발표하며 독일식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여젠다 2010'은 고용·연금·의료·세제·교육 등을 망라하는 개혁 패키지였다. 정부는 성장촉진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먼저 구축한 뒤 고용보장법 등 과도한 고용보장 정책을 개혁하며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왔다.

2005년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슈뢰더 전총리의 개혁정책을 계승했다. 또 일부 정책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기도 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독일 경제의 강점 3...강한 중소기업**

코쉬 차관은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혁 정사전인 '여젠다 2010'을 발표하며 독일식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여젠다 2010'은 고용·연금·의료·세제·교육 등을 망라하는 개혁 패키지였다. 정부는 성장촉진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먼저 구축한 뒤 고용보장법 등 과도한 고용보장 정책을 개혁하며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왔다.



불확실성 자성장, 저금리시대  
**KDB대우증권의 투자방법**

**세금혜택 받고 자산을 키우기 위한 든든한 투자방법**

▶ 장기국공채 ▶ 브라질채권 ▶ ELS/DLS(파생결합증권)

추천 DLS 기초자산 : 금, 은, 브렌트유, 미달러화가격, 미국하이일드ETF

**투자상품 가입 Festival**  
(2012. 10. 2 ~ 12. 31 / 개인고객 대상)

EVENT 1 **사은품 증정 이벤트**  
5만 원 이상 가입 고객 5만 원 상당 증정

EVENT 2 **경품 추첨 이벤트**  
5만 원 이상 가입 고객 10만 원 상당 증정

**KDB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 1588-3322

※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7일 이내의 투자철회권과 상품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투자 상품에 따라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 가입 전 계약문서상 투자대상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판매설명, 수수료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중도 환매 및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 모든 투자 수익은 원금, 원금에 따른 이자, 배당금, 수수료 및 기타 이익을 포함하여 투자한 원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 투자결정권은 투자자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본 중장기 발행은 최초 발행액 대비 초과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도 환매시 중도환매수수료를 정해진 금액에 지급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LS, DLS는 세법 혜택과 무관합니다.



**하르트무트 코쉬 독일 재무차관 (Hartmut Koschik)**

1958. 4. 16	독일 바이에른주 포르텐시머스
1978	기독교사회당(CSU) 입당
1978~1983	사회민주당으로 편입
1983~1987	본 대학서 역사학 정치학 전공
1987~1991	유럽적 연방 사무총장 (코쉬 차관의 부모가 추방자 출신)
1990~현재	연방하원의원(6선)
1998~2010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측 회장
2005~2009	연방하원 내 CSU 의원연합 사무총장
2009. 10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현재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로 등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 좋은 연구시스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한-독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코쉬 차관은 한국의 경제민주화와의 의미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는 다만 발전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인재들을 기르고, 인재의 중소기업에 투입했다"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justice@kmb.co.kr